

韓國의 通商·貿易政策의 展開 및 앞으로의 方向

張 石 煥

중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과거와는 다른 통상 및 무역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효율적 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비롯하여 경제의 국제화, 對개 도국 원조, 그리고 새로이 출범하는 WTO체제에의 대처에까지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 자유무역이 한층 더 활기를 띠겠지만 한·미통상 관계에서 보듯이 아직도 양자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NAFTA·EU·APEC 등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일무역역조로 인한 지역적 무역불균형의 해결과 후발 개도국의 추격에 대응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한국경제의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앞으로의 통상·무역정책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WTO체제에 맞게 보조금등 국내의 제반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일무역 협조 해소를 위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노동·환경 등 소위 뉴우라운드에 대비해 나갈 것이다.

1. 中進國으로 浮上한 韓國經濟의 새로운 通商·貿易環境

지난 30여년간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이제 한국경제는 개도국을 출입하고 中進國으로 탈바꿈하였다. 국제경제사회에서 중진국은 개도국과는 다른 역할과 책임을 부과받기에 이제부터 한국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通商 및 貿易環境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진국으로서의 새로운 통상 및 무역환경은 우리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고도화에서 시작해 경제운영의 자율화, 국제화 그리고 눈을 밖으로 돌려 새로이 출범하는 국제무역기구(WTO)체제에 대한 대처에까지 실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과거와 같이 국내시장은 폐쇄한 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선진국시장을 일방적으로 공략해 오던 식의 무역 및 통상정책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나 몬트리올 의정서 등 각종 국제규범이나 협약에서 개도국을 출입한 국가는 시장개방, 공해물질사용 등에서 더욱 엄격한 의무나 책임을 부여받는다. 또한 선진국 그룹인 OECD가입을 위해서는 GNP의 일정액(0.7%)을 원조해야 하고 개도국의 기술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남다른 책무를 지닌다.

產業이나 貿易構造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5년간 임금이 2배로 상승한 국가로서 과거와 같이 노동집약적 상품위주의 무역구조로는 더 이상 지

속적 성장을 보장받을 수 없다. 산업과 무역구조 그 자체를 기술 및 자본집약형으로 고도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진기술이 필요한데 부메랑효과를 두려워하는 선진국은 우리에 대해 날로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해 가고 있다.

한결음 더 나아가 중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경제는 국내시장개방의 미흡, 부진한 국제화 등으로 인해 홍콩, 대만같은 이웃국가보다 더욱 첨예한 양국간 통상마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 통상상대국인 미국은 무역수지적자의 문제를 미국 산업경쟁력의 회복보다는 상대국시장의 개방을 통해 해결하려는 ‘結果指向的 通商政策’(result-oriented trade policy) [Laura D'Andrea Tyson(1992)]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끝으로,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본질 자체도 범세계화(globalization)와 지구촌경제를 향해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범세계화추세에 부응하여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1.1. WTO體制의 出帆

우루과이협정타결과 함께 지난 47년간 세계교역 질서를 규율해 오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으로서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국제협정에 불과했던 GATT와 달리 WTO는 각국간의 분쟁해결도 할 수 있는 상설국제기구로서 향후 21세기 國際經濟秩序를 규율해 나갈 것이다.

WTO체제 출범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

우선, 동경라운드 타결이후 80년대까지 소위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로 불리운 세계무역질서의 큰 흐름을 다시 自由主義로 선회시켰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GATT는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표로 우루과이라운드 이전까지 7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을 크게 완화하고 세계무역의 대부분을 GATT체제로 편입함으로써 세계무역의 획기적인 증대에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GATT체제 하의 무역량은 세계전체무역의 91%를 점유하게 되었고, 1948년에서 1993년까지 세계경제 평균성장을 4%를 크게 상회하는 8%의 교역신장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종전의 국제분업체제가 일대 개편된 70년대 후반 이후 GATT는 국제무역규범으로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선, 선진국간 또는 선·후진국간에 무역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GATT 규정을 우회하는 수출자율규제(VER)나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의 쟁무적 무역규제 조치가 속속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GATT 규범 밖에 있었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무역마찰이 빈번하고, 금융·통신 등 서비스분야의 교역이 전체 국제교역규모의 22%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국제규범이

탄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농산물·섬유 등도 GATT체제 밖에서 광범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폭넓은 예외가 인정되었고 생산과 자본의 국제화에 따라 각국의 투자 환경에 관한 국제적 규율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40여년간 GATT가 세계자유무역의 발전에 기여하기는 했지만 서비스등이 빠져 그 규율대상범위가 다소 제한되어 있었고 선진국의 자의적 수입규제등으로 그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인상이 짙다.

이에 WTO체제는 이같은 GATT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하는데 그 의미는 “機構다운” 기구, “좀더 包括的”인 기구, 그리고 “좀더 強力한” 기구의 탄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43년 브레튼우즈에서 생각했던 “기구다운” 국제기구가 반세기만에 출범하는 것이다. 브레튼우즈(Bretton Woods)협정에서 GATT를 탄생시킬 때 각국은 지금의 WTO와 같이 분쟁조정기관으로서 ITO의 설립을 기도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자유무역의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각국의 무역에 관한 主權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논의와 함께, 미국의 회에서 비준이 거부됨으로써 브레튼우즈 정신이 미완성작품으로 출범했는데 5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WTO 탄생으로 그가 완성되는 것이다.

둘째, “좀더 포괄적”인 기구의 탄생이다. WTO에 의해 GATT체제가 다루는 국제무역의 분야는 다분히 제한적이었다. 우선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이 다자간 규범 밖에 있었고, 농산물과 섬유가 GATT체제 속에 있기는 했지만 불완전하게 규율되었다. 그러나, UR에서는 이같은 GATT체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서비스, 지적 재산권, 섬유, 농산물 등 무역에 관한 모든 분야를 WTO체제 속에 포함시켰다.

셋째, “보다 강력한” 기구의 탄생이다. GATT체제도 도쿄라운드등을 거치며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였지만 선진국이 각종 수입규제조치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한국같은 나라가 많은 피해를 보아왔다. 그러나 WTO가 각종 무역규범을 명료화하고 다자간 분쟁해결 절차를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앞으로 국제무역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선진국이 자의적인 각종 수입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국같은 나라가 對先進國 무역을 향에 있어서 事前의이나 事後의으로 상대국의 행동을 보다 명확히 예측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UR협상결과가 본격 시행되고 이를 감시할 WTO가 정식 출범하면 貿易障壁의 완화와 효율적인 資源利用이 이루어져 國際貿易 및 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GATT에서는 UR타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10년후 세계교역량이 연간

약 7,450억 불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서방 선진국기구인 OECD도 UR 타결이 세계 전체적으로 연간 2,740억 불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計量化가 곤란하여 이들 분석에서 감안되지 않은 서비스분야의 자유화 확대나 무역규범의 강화에 따른 교역증대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1.2. 經濟의 汎世界化(globalization)

1970년대 이후의 자본과 생산의 국제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경제의 범세계화는 1990년대 들어 더욱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세계무역보다도 더욱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국제생산체계를 발달시켜 오늘날 국제생산규모는 4.4조불로 세계전체 무역규모 2.5조불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表 1〉 참조).

〈表 1〉 國際生產과 世界輸出의 變化推移

(단위 : 조불)

연 도	국제생산(A)	수 출(B)	A/B
1982	2.4	1.5	1.6
1984	2.5	1.4	1.7
1987	3.5	2.0	1.7
1989	4.4	2.5	1.8

註 : 1) 국제생산이라 함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해외자회사의 매출액을 합친 것임.

資料 : UN, "World Investment Report, 1992," p.55.

더우기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으로 둘러싸인 전통적 국민경제의 개념이 퇴색되고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의 범세계화 추세 속에서 재화와 자본뿐만이 아니라 생산활동 그 자체가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명실상부한 地球村經濟가 형성되고 있다.

〈表 2〉는 미국, 일본 등 5개 선진국기업의 해외자회사 매출(즉 국제생산)규모가 GDP와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의 경우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가 이룩한 총매출은 같은 해 미국 GDP규모의 약 23%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12%, 독일 17%인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무려 81%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00년에 이르면 미국 25%, 일본 24%, 독일 24%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말하자면 2000년에 가면 미국이

〈表 2〉 主要 先進國의 GDP와 比較한 國際生產規模

(단위 : %)

나 라	1976	1990	2000
미 국	20	23	25
일 본	9	12	14
독 일	10	17	24
영 국	38	44	48
스 워 스	81	81	81

資料 : Bernard Bonin(1987, p.59).

나 일본의 경우 해외자회사가 생산·판매하는 매출규모는 그들 GDP규모의 약 1/4에 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의 범세계화는 세계경제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극복하여야 할 도전도 동시에 제기한다.

첫째, 경제의 범세계화가 가져올 최대의 이점은 국제분업을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우선 世界厚生增大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자원의 최적배분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다. 다국적기업은 해외의 최적생산거점에 자본을 이동시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을 구현한다. 자본의 한계생산력 측면에서 국제자본이동을 고찰하는 신고전학파 입장에서 볼 때 다국적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자본을 이동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자본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세계후생(world welfare)의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범세계화와 더불어 기업이 최적생산거점에 자원을 집중배분하여 세계적 규모에서 대량생산을 함으로써 장기평균비용곡선을 낮추고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단위생산비용을 낮추어 같은 질의 상품을 보다 싼값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만듬으로써 엄청난 소비자잉여 증대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범세계화의 진전은 不公正貿易에 대한 制裁手段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정책 당국자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반덤핑조치에 의하여 불공정무역을 제재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현지국이나 제3국으로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수입국의 무역조치를 우회(circumvention)할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각국은 자국법에 기초한 우회방지조치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지생산이 과연 불공정수출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회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조치의 남용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범세계화가 확산되면서 國家間 經濟體制의 差異(national system differences)가 새로운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국내제도와 시장구조 및 기업관행의 국제적 차이는 기업들의 거래비용을 상승시키고 범세계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동안 GATT체제의 무역자유화에 힘입어 발전해왔던 범세계화의 물결은 구조적 장애(structural impediments)라는 시장접근의 새로운 장벽에 부딪혀 있는 것이다. 현재 미·일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쟁문제와 선후진국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환경 및 노동문제가 바로 이들에 해당하는 좋은 예일 것이다. 말하자면, 범세

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통상마찰이 현재화하고 있다. 향후, 이들에 관한 적절한 국제규범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또 다시 관리무역이 득세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범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환경이 동반할 잠재적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환경, 노동을 비롯한 무역관련 국내정책이슈들에 대한 국제규범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3. 雙務主義와 地域主義의 尚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UR협상의 종결과 WTO의 출범이 세계경제에 새로운 도약의契機가 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에 접어 들었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도 통상관계에서 양자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多者間 規範과 兩者間 規範으로 二分할 수 있다. 다자간 규범이 GATT, WTO같이 무역에 참여하는 여러 나라가 모여 국제무역의 발전에 관한 일반적 규범, 즉 法을 만드는 것이라면, 양자간 규범이란 한·미통상협상과 같이 자국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상대국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해서 다자간 규범이 국제무역의 “法”이라면 양자간 규범은 “힘겨룸”이다. 힘센 나라의 논리가 약자 나라에게 강요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양자관계의 가장 좋은 예가 주요 선진국의 통상정책이다. 미국은 최근에 슈퍼 301조를 부활하였는데 이는 WTO라는 새로운 다자간 규범의 출범에 깃발을 든 나라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WTO체제 출범으로 모든 무역분쟁이 다자간 차원에서 해결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양자관계에서 선진국의 일방적인 규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제소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등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의 통상정책도 우리가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논의될 새로운 라운드로서 환경, 노동, 기술, 경쟁 등 각종 國際規範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表 3〉 世界主要經濟團體 現況

경제團體名	加 入 國	目 標	比 較
EU	유럽 12개국	화폐통합등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의 실현도 포함	1993. 1. 부터 EU단일시장 출범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국간 무역 및 투자자유화	1994. 1. 부터 발효
AFTA	ASEAN 6개국	ASEAN 6개국간의 교역자유화	1993. 1. 발족

註: 1) EU는 GATT 24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

오늘날 지역주의는 유럽, 미주, 아시아지역 모두에서 태동되고 있다. 북미 3국은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을 체결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APEC결성을 논의하고 있다. 명분상 이러한 경제블럭은 GATT의 규정과 정신을 준수한다는 테두리 속에 형성되고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EC의 예에서 보듯이 域外國家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어떠한 경제블럭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역주의 심화가 다자무역 체제의 약화 및 보호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世界三大 지역경제권의 결성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방적 지역주의(Open-Regionalism)를 지향하는 APEC의 성공적 발전은 GATT/WTO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아·태 지역에서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에 한국은 APEC이 아·태 경제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역내 무역자유화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아·태지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겠다.

2. 21世紀 新通商・貿易秩序와 韓國經濟의 課題

2.1. 無限競爭時代의 到來

GATT시대가 세계시장 탈취를 위한 제한적 경쟁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Post-UR시대는 無限競爭(global competition)시대라 할 수 있다. GATT체제가 국경을 넘은 상품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한 世界經濟라면 WTO체제는 단순히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농산물 등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 한층 촉진시키기 위한 세계무역의 새로운 체제이다.

과거 GATT체제에서 각국의 기업은 국민경제의 틀 속에서 정부보호로 힘을 키우고 일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나면 세계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다. 국내산업의 경쟁기반이 취약할 때 높은 관세나 투자장벽에 의해 외국기업이나 제품이 국내에 빨을 못붙이게 하고, 그간에 보조금, 정책금융 등에 대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난 후 수입이나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는 것이다. 하여튼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 이같은 전략으로 70년대에는 조선과 철강공업을, 80년대에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 산업화하였고 이 덕분에 오늘날 우리 나라는 GNP규모 세계 13위의 중진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경쟁원리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

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WTO체제 출범이 막바로 無限競爭時代의 도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UR로 각국간 투자 및 무역장벽이 낮아지니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하는데 지켜야 할 규칙(rule)이 많아졌으니 국제경쟁 그 자체가 치열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막바로 각국간 국경장벽이 아주 무너져버리는 無限競爭時代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無限競爭이라 하는 것은 WTO체제의 출범뿐만 아니라 오늘날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이나 콘테이너운송수단의 발달, 국제간 차분이동과 투자 등과 같이 국경의 개념을 퇴색시키는 세계경제의 地球村化현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같은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구촌시대가 도래하면 우리 기업은 세계시장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이 땅에 진출한 외국기업, 외국상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과거와 같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기는 점점 힘들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산업은 유치산업과 사양산업이다. 유치산업이란 말 그대로 아직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산업인데 초기단계에서부터 외국제품과 막바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과점적인 국내시장이나 관세장벽을 배경으로 그간 정부보호에 안주하고 있었던 사양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무자비한(?) 구조조정과 자기변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지구촌경제에 생존할 수 없다. 과거에는 정부보호에 의해 각나라가 산업내에 최소 몇 개의 국민기업(national champions)을 육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의 汎世界化・地球村화가 가속되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주요산업에서 몇 개의 세계기업(world champions)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예측도 있다.

이를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자동차산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2~3개의 자국 자동차업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포드, 크라이슬러, GM의 “빅 스리”(Big Three), 불란서는 르노, 시트로엥, 푸조, 이태리는 피아트와 알파로메오, 독일은 벤츠, 폭스바겐 그리고 BMW 등이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주요자동차 생산국이 그 나름대로 서너 개의 자국마크가 달린 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WTO체제가 틀을 내리는 2020년경에 자동차산업 자체가 汎世界化(globalization)하면 세계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토요타, GM, 벤츠 등 불과 7~8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국정부의 보호나 자국소비자의 國產車애용이라는 애국심에 의존하여 명맥을 이어온 자동차 산업체가 無限競爭에 이기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地球村經濟시대에 無限競爭의 한 극단적인 예를 든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美MIT대학의 레스터 더로우(L. Thurow)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차대전 이후 40여년 동안 모든 국가들은 패배자 없는 經濟게임, 즉 ‘포지티브-섬(positive-sum)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어느 한 나라가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제로섬(zero-sum)게임’의 경쟁시대가 도래하게 된다”[Thurow, Lester(1992)].

2. 2. 三元的 國際分業體制에서 中進國으로서의 役割 및 限界

GATT체제에서의 국제분업체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양분되는 二元的 國際分業體制였다면, 앞으로는 三元的 國際分業體制가 전개될 것이다. 국제분업체제 속에 중진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군이 등장하는데 이의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대만 같은 소위 신홍공업경제(NIEs)이다. 이들 중진국은 三元的 國際체제 속에서 독특한 비교우위를 지녀 선진국이나 개도국과는 다른 산업구조나 무역행태를 가진다. 즉, ‘比較優位의 相對化 原則’에 의해 선진국에 대해서는 중급의 숙련노동 집약적인 분야에 대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개도국에게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무역구조도 선진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하고 최종재를 수출하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로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출하고 1차상품과 경공업 중심의 최종재를 수입한다.

한국같은 중진국에게 이는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던진다. 우선, 중진국이 가지는 부담아란 後發開途國의 追擊(catch-up) 때문에 종전의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해가며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국내적으로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같은 전환기적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후발자에게 추격당하게 된다. 최근 들어서 한국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1988년의 4.9%에서 1993년에는 2.9%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1988년의 0.8%에서 1993년에는 5.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등 후발 개도국이 섬유,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한 중진국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

그러나, 既述했듯이 三元的 國際분업체제에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중진국에게 새로운 시장기회도 함께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과거 일본이 우리에 대해 그래왔듯이, 산업화에 필요한 기계설비등 자본재와 원부자재를 개도국에 수출하는 기회가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 사실, 1991년 이후 우리 나라의 지역별 수출구조를 보면 1991년에 개

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7.8%였는데 중국, 동남아국가에 대한 자본재와 원부자재 수출에 힘입어 1994년 상반기에는 동비중이 48.8%로 증가하였다.

중진국은 선진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에 선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가전, 섬유 등 과거의 輸出主宗商品에서 개도국에 시장을 빼앗기지만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말하자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한국같은 중진국은 경쟁력을 잃는 사양산업을 축소조정하고 자신의 비교우위에 맞는 새로운 하이-테크 분야로 산업 및 무역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2.3. 地域的 貿易不均衡 및 通商摩擦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는 미국과는 미·일 통상마찰을, 한국에 대해서는 對日 무역수지 역조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對日逆潮 개선 노력으로 80년대 후반 한동안 축소되던 대일역조는 9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59억불에 달하던 對日무역적자가 1993년에는 84.5억불로 늘어났다. 1994년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대일수출은 중화학 제품과 부품·소재 수출의 호조로 14.6%가 늘어남으로써 1989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수입도 21.8%나 증가하여 연말까지의 對日역조폭은 작년보다 더 큰 100억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대일역조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그간에 일본으로부터 전자부품·기계류 등 자본재와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가공한 후 해외에 수출하는 성장패턴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對日무역역조가 이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한 단기간내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는 韓美通商摩擦일 것이다. WTO 출범으로 쌍무주의가 종전에 비해 억제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EU 등은 쌍무차원에서의 통상문제해결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슈퍼 301조의 永久法案化, 금융보복법안과 노동·환경 무역법안(Blue & Green 301조)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규범이 설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쌍무적 통상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통신서비스, 의료장비 등 첨단기술산업,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분야 등 WTO가 관할하지 않는 영역에서 미국, EU 등 경제대국과 통상마찰이 첨예화될 우려가 크다.

최근에 한·미 간에는 미국산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문제, 지적재산권 보호분야, 식품위생검사,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의 통상현안이 양국간 정부의 쌍무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3. 앞으로의 通商·貿易政策 方向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다가오는 새로운 통상·무역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앞으로 UR 이후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내의 각종 비합리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하면서 모든 경제주체의 중지를 모아 “UR 이후 國際潮流의 흐름”에 슬기롭게 대비해 갈 것이다.

WTO체제의 출범과 UR 이후의 새로운 국제통상·무역의 흐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 경제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둘째, UR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이를 계기로 경제운용방식을 선진화하고, 셋째, 경제의 범세계화와 함께 다가오는 ‘無限競爭’ 시대에 대비한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며, 마지막으로, UR 이후 전개될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多者論議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쌍무적 통상문제와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3.1. 經濟의 國際化 推進

경제의 국제화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이다.

오늘날 국제화란 용어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사회·교육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통상·무역정책 측면에서 볼 때 국제화는 對外的 국제화와 對內的 국제화로 二分될 수 있다. 대외적 국제화란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 수출, 생산, R&D,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제의 국제화(globalization)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개념이고, 이에 반해 대내적 국제화는 개방과 자유화 등을 통해 국내경제와 산업체제를 국제화시키는 것이다.

국내 산업보호나 높은 외국인투자장벽, 수입장벽 그리고 지나친 정부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은 본의 아니게 국제적 수준에서 낙후되어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자유화, 투자개방 그리고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 선진경영기법을 받아들이고 그간의 정부보호하에 왜곡된 독과점적 산업부문에 해외 경쟁을 도입하여 산업 각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화는 “選擇”이 아닌 무한경쟁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當爲”이다. 세계의 모든 기업이 전세계를 상대로 가장 생산비가 싼 곳에 최적생산거점을 마련하고, 가장 자본비가 싼 곳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이른바 범세계적 최적화 전략(global

networking)을 구사하는데 우리 나라만 과거의 구태의연한 발상에 묶여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입지선택등을 제한하며 국제화 추진을 저연시킨다면 이는 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기업은 눈을 밖으로 돌려 세계의 경영환경을 최적으로 결합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global) 경영전략을 실시하며,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하루 빨리 구축하여, 국민 각자는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국제시민이 되는 소위 三位一體的 國際化를 추진해야 하겠다.

이에, 첫째 정부는 국제화추진위원회, 신경제국제화 추진계획, 그리고 기업세계화 지원기획단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국제화를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난 6월 10일 외국인투자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업종의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절차 간소화, 외국기업 전용공단 설치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셋째, 경제국제화의 마지막 과제는 과감한 규제완화이다. 경제분야의 국제화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겠는데 이는 기업의 창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창달하여 우리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상공자원부에서는 1993년 8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조업 관련분야의 행정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2. UR 後續措置와 補完對策의 跛跌없는 推進

WTO체제에 맞게 국내경제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통상·무역정책의 시급한 첫과제이다. UR협정은 보조금, 반덤핑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투자 등에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국내의 기존산업지원제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을 새로이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

이에 정부는 먼저 1995년 중 발효될 WTO협정에 맞추어 국내제도 및 법령의 개편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각 부처별로 국내제도를 WTO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 20여개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UR협정 발효후 3년 내에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수출자율규제등 모든 灰色措置(VER 등)를 협정발효후 4년 내에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 중 금지보조금은 협정발효후 3년(개도국은 5~8년)내에 폐지하거나 허용되는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섬유류타는 UR협상 타결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철폐해야 한다.

또한, 농업·서비스·섬유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종전과 같이 특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이나 수입제한을 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등 明示의 산업 및 무역정책(explicit industrial & trade policy)을 추진하기가 곤란해지기에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국제규범과의 일치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나감으로써 무역분쟁의 소지를 미리부터 예방해 나가야겠다.

한편, UR협상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금융·통신·해운 등 서비스분야의 후속협상에도 대비하면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 완화로 우리의 수출환경이 나아진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 수출촉진대책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3.3. 產業의 國際競爭力 強化 및 地域間 貿易 不均衡 解消

다음으로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선된 대외무역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市場成果側面에서 평가해 보면 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성과가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나았으나, 90년대 들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악화의 정도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였다. 현재 우리 기업은 과다한 금융, 물류비용부담, 기술경쟁력의 취약성, 지나친 기업활동 규제 등으로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994년 9월 발표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가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분석대상 41개국 중 24위로 평가하였고, 특히 18개 개발도상국 중 한국을 말레이지아, 태국에도 뒤지는 7위로 평가하였다. 특히 동 연구소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국제화부진, 정부규제, 금융산업 낙후로 인하여 개도국 중 1991년 3위에서 1994년 7위로 하락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技術開發이다. 국제적으로 각국의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자체 기술개발 없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대일역조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기술은 그 특성상 외부경제효과가 크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많은 연구개발비 부담과 개발위험을 젊어져야 하지만 일단 한 사회에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다른 기업에 파급(spillover)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이 크다. 이를 기술개발의 외부경제효과라 하는데 이 효과는 기초과학기술, 공통기반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현저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같은 기초, 기반기술분야에 대한 적극적 R&D투자를 통해 국민적 과학기술잠재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지막 방법은 국제간 산업기술협력의 효율적 추진이다. 국제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는 산업기술협력재단을 발족시켜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일본과는 韓日협력재단을 통해 생산기술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는 자동차, 전자교환기, 항공기 등 분야에서 산업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간 무역불균형, 특히 대일무역역조는 대일 의존적인 산업구조, 현저한 기술격차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본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중화학제품 및 부품·소재 수출호조로 인한 대일수출구조의 변화와 엔고로 축발된 일본내 산업구조조정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여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對日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자금을 집중지원하고 대일 수출 전문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농림수산물 수출보험제도, 해외전시회 및 광고비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업계의 대일 마케팅 활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3.4. UR 以後의 通商·開放問題에 대한 效果的인 對應

끝으로, WTO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새로운 다자통상이슈에 논의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쌍무적 통상문제나 지역주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이 논의될 이슈들의 대부분은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의 다자논의와 관련해서는 ‘南北協力’의 정신과 이상이 다소 퇴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가 점에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조가 아닌 무역을 통한 개도국 지원”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소위 “脫冷戰-不況”으로 불리는 최근의 경기침체(OECD국가의 경우 실업률이 8.5%, 실업자수가 35백만명에 달함)를 경험하고 있는데다, 다수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으로 의무의 분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다자논의에 대하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미 간의 통상마찰뿐만 아니라, APEC, AFTA, NAFTA,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 등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시장개방이 보다 가속화되면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UR협상에서 협용된 이행기간에 맞추어 시장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선 정부는 관세조작 및 무세화협상 결과에 따라 품목별로 5~15년 내에 관세를 인하해 나가고, 금융·통신·유통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외국인투자 개방에 5개년계획에 따라 年次的으로 개방폭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WTO체제의 無限競爭은 우리 기업 세계화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 반도체 등 '성장산업' 부문에서 세계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하고, 해외투자전략이나 생산공정의 국제간 분업전략을 쓰면 우리가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成熟產業" (sun-set industry) 부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기업과 손을 잡고 전략적 제휴를 하든가 라인센싱 등을 통한 기술협력전략을 펼치면 "하이-테크 산업"에도 효과적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商工資源部 第1次官補

427-760 경기도 파주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 503-9415

팩서 : (02) 503-9496

參 考 文 獻

Bonin, Bernard(1987) : *Le Monde des Multinationales*, Paris.

Thurow, Lester(1992) : "Head to Head,"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New York.

Tyson, Laura D'Andrea(1992) :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UN(1992) : "World Investment Report."